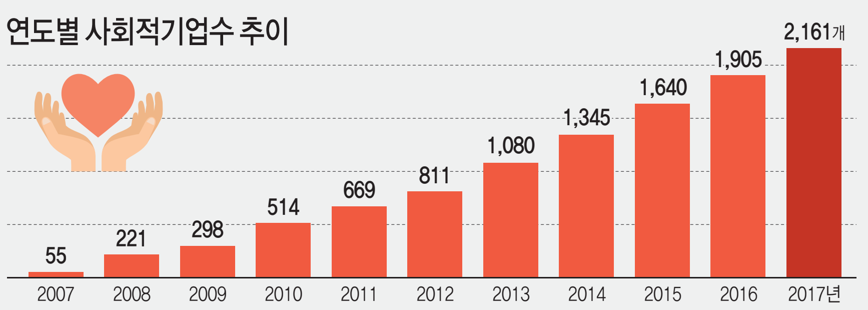
정부만 바라보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은 '글쎄~'

IBK경제연구소, 158개 기업 분석
기업 급증에 지원금 연평균 10%↑

5년 경과후 당기순이익률 -5.9%
기업당 고용수는 3분의1로 급감



사회적기업 수익성 추이

	1년 경과	3년 경과	5년 경과	7년 경과	9년 경과
평균당기순이익률	5.1%	2.4%	−5.9%	−1.4%	−1.1%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IBK경제연구소

사회적기업이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여전히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수익성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에 못 미쳤다.

2일 IBK경제연구소가 사회적기업 중 재무정보가 있는 158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 인증 후 플러스(+)였던 평균 당기순이익률은 정부지원이 중단되는 5년 경과 후에는 -5.9%로 급격히 하락했다.

사회적기업은 인증기준으로 2007년 55개에서 지난해 2161개로 연평균 44.4% 증가했다. 정부지원금 역시 2011년 887억원에서 2016년 1407억원은 연평균 10% 가까이 늘었지만 사회적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후 1년, 3년 경과 시점에는 평균 당기순이익률이 각각 5.1%, 2.4%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지원이 중단되면서는 ▲5년 경과 -5.9% ▲7년 경과 -1.4% ▲9년 경과 -1.1%로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인증 5년 이후를 저점으로 수익성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지원 중단 이후 생존이 어려운 사회적기업이 모두 이탈하고, 살아남은 기업의 수익성만 집계됐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들은 대부분 업력이 짧고 영세했다.

업력은 3~6년이 35.4%로 가장 많았고, 10년 미만 업체가 전체의 69.0%를 차지했다. 중소제조업(40.8%)이나 중소서비스업(49.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매출규모로는 50억원 이하 업체가 전체의 77.8%로 대부분 소규모에 그쳤다.

2007년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취소율은 지난해 기준 32.7%에 달했다. 경영악화로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기면서 인증 후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취소율이 높아졌다. 상당수의 사회적기업이 사업성은 없고, 생존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사회적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인증 취소 기업 중 수익창출을 못해 폐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약 5년 동안의 지원 이후에는 인건비, 재정지원 등의 혜택이 없어지는데 굳이 적자를 보는데도 운영할 이유가 없고, 기준만 맞추면 거의 인증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원금만 노리고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사회적기업의 총 고용은 지난해 4만1417명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32.2% 늘었다.

그러나 기업당 평균 고용수는 2007년 68.6명에서 지난해 22.1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김용덕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 확대는 오로지 인증기업 수 증가에 의존한 것"이라며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간 지원기관과 연계하고, 지원이 끝나더라도 사후관리제도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며 "이와 함께 시장에서 잘 팔리는 사회적기업의 제품부터 혜택을 주는 등 경쟁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감기몸살에 걸려 지난달 28일부터 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공식 출근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자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는 확실한 대책"

文 대통령, 나흘만에 공식일정
"과로사·산재 등 획기적으로 줄 것"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늘 강조해오다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말을 듣게 돼 민망하다."

연일 계속된 일정 등으로 과로와 감기몸살로 인해 이틀간의 연가를 포함해 나흘만에 공식 일정을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던진 첫 마디에 참석자들이 웃음을 지었다.

노타이 차림으로 나타난 문 대통령의 안색은 평소와 별 차이가 없었지만 얼굴은 살짝 수척해졌고, 쉰 듯한 목소리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평소와 같이 9시께 집무실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는데 이는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며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토대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해 귀중한 국민 생명과 노동자 안전권을 보장하는 근본 대책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정부는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삼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주기로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췄다"며 "그 취지를 잘 살려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게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거비·통신비·의료비·보육과 교육비 등 국민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부 정책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며 "이제 첫발을 내디딘 노동시간 단축이 빠르게 안착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게 노동계·경영계는 물론 국민께서도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무산으로 제2 국무회의도 무산됐지만, 시도지사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정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면서 "그(지방분권 개헌) 취지는 살려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시·도지사 당선인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감기몸살로 휴가를 내면서 일정이 취소됐다.

/김승호 기자 bada@

송영중 거취논란, 김영배 비자금 의혹 제기 때문?

경총사태 '점입가경'

오늘 임총서 송 부회장 해임 예정
김영배 "비자금 조성은 오해" 부인

경총, 송영중 상임부회장. /연합뉴스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근 제기된 부회장 시절 사업수입 유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중 상임부회장의 거취 논란으로 시작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내홍이 김영배 전 부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경총이 몸살을 앓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경총은 오는 3일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잇따라 열고 송 부회장의 해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송 부회장이 손경식 경총 회장으로부터 '직무정지'라는 사실상의 불신임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 임시총회에서 송 부회장의 해임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 시절 경총이 일부 사업수입을 유용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임직원 특별상여금(격려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

경총은 실제 2004년 이후 일부 사업수입을 이사회나 총회 등에 보고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 중 일부를 임직원 격려금 지급에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경총은 "사무국 직원들에게 다른 경제단체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기가 어려워 매년 우수 인력의 이탈과 사기 저하가 고질적인 문제였다"며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회계, 용역사업, 기업안전보건위원회 회계에서 일정 부분을 분담해 연간 월 급여의 200~300% 내외의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금 조성 의혹은 부인했다. 상여금 지급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자금 조성으로 오해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같은 경총의 격려금 지급 관행을 문제 삼은 인물이 4월 새로 취임한 송 부회장이다. 송 부회장은 새로 부임한 뒤 이 같은 회계 처리 관행이 투명하지 않다며 손 회장에게 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감사팀장을 임명해 이 사안에 대해 감사도 벌였다.

다만 경총은 "송 부회장이 임명한 내부 감사팀장의 감사 결과에서도 특별상여금 지급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 방식을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보니 재계에서는 이번 비자금 의혹 제기의 출처가 송 부회장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좀 더 크게 보면 송 부회장의 이 같은 개혁·변화 시도가 기존 경총 사무국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면서 송 부회장에게 거취 논란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표면적으로는 송 부회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노선을 같이 했다는 비판, 재택근무 등이 송 부회장 거취 논란의 발단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총 사무국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기존 직원들과의 마찰이 송 부회장에 대한 직무정지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3일 열릴 경총 임시총회에서 송 부회장이 재신임을 받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연합뉴스